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황태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서론

올해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해방 후 한반도는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을 겪었고 이후 분단은 고착화됐다. 이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한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에게 분단은 한국 전쟁이란 내생성의 기억을 상실한 채 외생적으로 주어진 국경이고 옛날이야기가 됐다. 장기화된 분단체제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2017년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는 보수와 진보 정권의 대북, 통일 정책을 번갈아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사람이 변하고 정권이 변하고 따라서 정책도 변했지만 7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남북한이 대결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전히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다. 1950년대부터 시작한 핵무기 개발의 꿈을 2017년 말 거의 완성했고,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 위협에 맞서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단일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던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인의 정체성’은 중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분단, 북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면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장에서는 2020년 상반기 동아시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설문 결과를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인 정체성 조사’는 동아시아연구원이 주관하여 2005년부터 5년 간격으로 동일하게 진행됐다. 총 네 번의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분단 인식,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선호, 통일 인식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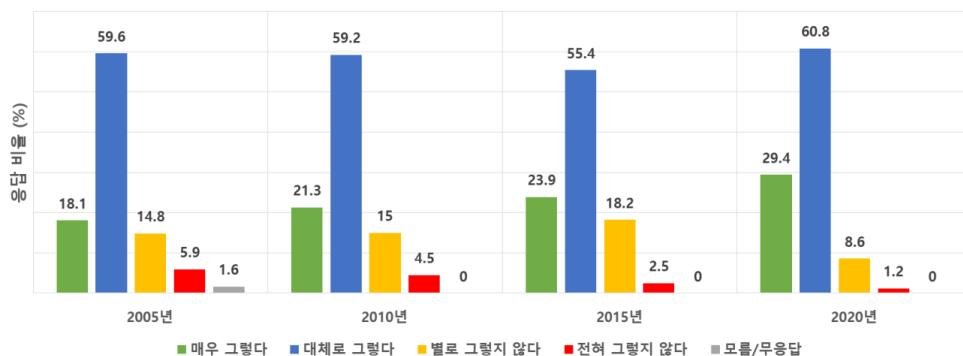
## II. 분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반도 분단과 북한의 존재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북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이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90.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독립국가란 인식이 90%를 넘긴 것은 2005년 설문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긍정과 강한 긍정 모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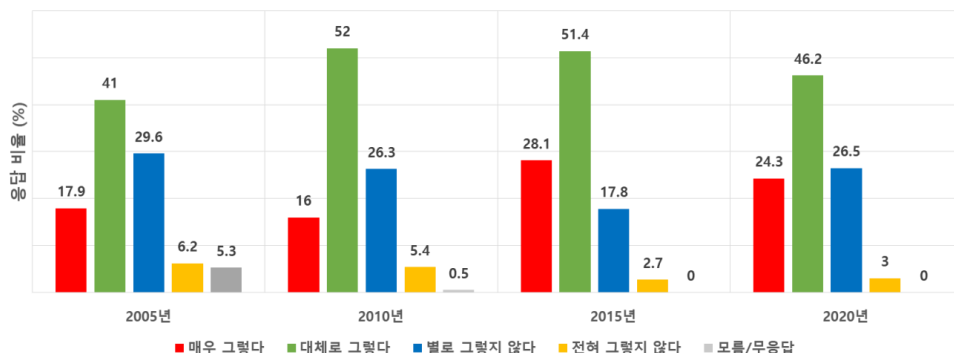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남한 정부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24.3%), ‘그렇다’(46.2%)로 나타나 70.5%의 응답자가 북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조사 결과에서 같은 설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28.1%), ‘그렇다’(51.4%)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남한만이 합법적이란 인식은 2015년에 비해 2020년 조사에서 감소했다. 2005년 이후 남한만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과반이 아닌 적은 없었지만, 진보 정권 시기 설문 결과(2005, 2020)와 보수 정권 시기 설문 결과(2010, 2015)를 비교하면 진보 정권 시기 남한만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앞의 분단 관련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각 응답 카테고리의 빈도수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그림으로 정리했다.

<그림 1> 분단에 대한 인식

남한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남한정부이다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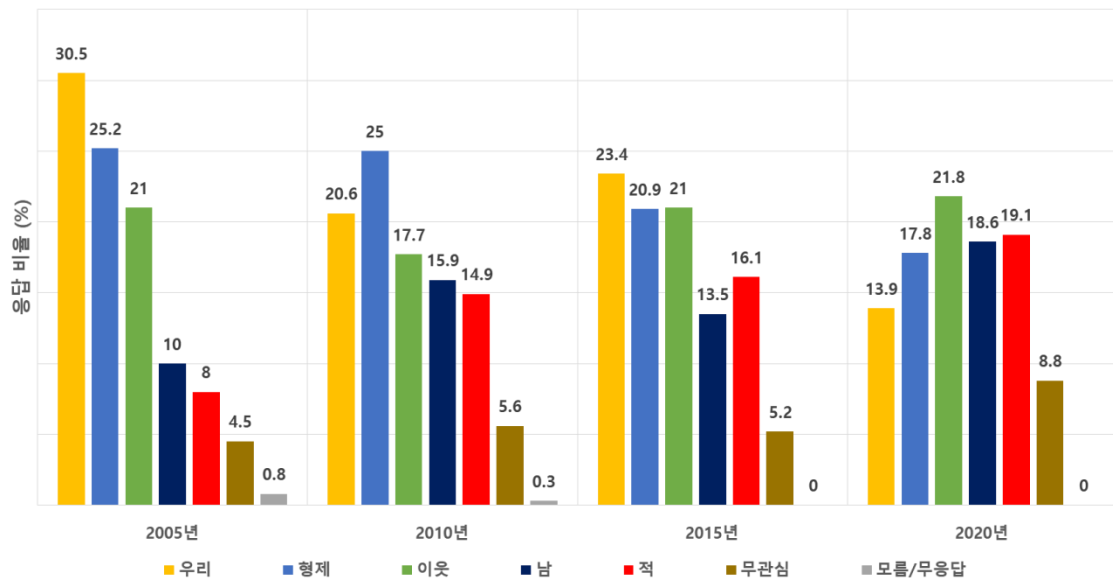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III.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2020년 조사 결과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점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하락하고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긍정적 인식의 하락에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2>는 북한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의 설문 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했다.

<그림 2> 북한에 대한 인식 1순위

평소 북한에 대한 인식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평소 북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우리’(13.9%), ‘형제’(17.8%), ‘이웃’(21.8%), ‘남’(18.6%), ‘적’(19.1%), ‘무관심’(8.8%)으로 응답했다. 첫째, 북한을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고 ‘우리’, ‘형제’로 보는 인식은 2005년 이후 네 번의 조사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북한을 가장 우호적으로 보면서 ‘우리’로 응답한 비율은 2005년 30.5%에서 2020년 13.9%로 가파르게 감소했고, ‘형제’로 응답한 비율도 25.2%에서 17.8%로 감소했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로 특히 ‘우리’로 보는 비율이 23.4%에서 무려 9.5% 가까이 감소했다. 둘째, 긍정적 인식의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있다. 긍정 범주에 속하는 ‘우리’(13.9%), ‘형제’(17.8%), ‘이웃’(21.8%)의 상대적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조사 당시 ‘우리’>‘형제’>‘이웃’의 순서로 형성된 긍정 정도가 15년 동안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20년 ‘이웃’>‘형제’>‘우리’의 순서로 바뀌었다. 2005년 긍정 범주 비율은 세 응답을 합해서 무려 76.7%에 이르렀다.<sup>1</sup> 하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긍정 범주 비율이 53.5%

<sup>1</sup> 북한 인식을 ‘이웃’으로 답한 경우 긍정적 견해로 볼 것인지 보다 중립적 견해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로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20% 넘게 감소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긍정 응답 내에서 우호적인 인식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 인식이 줄어든 이유로는 북한의 거듭된 안보 위기 조성 때문에 팽배해진 한국 내 위협 인식을 들 수 있다. 2006년 시작된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도발로 한반도에 안보 위기 상황이 계속 심화됐는데 2016년과 2017년 급격히 도발 횟수를 늘리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한미동맹에 기대어 북한의 진전된 핵무기 체계에 대항해야 하는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단순히 민족적 동질감으로 이해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반면, 2015년과 비교해 2020년 북한을 ‘남’이나 ‘적’, ‘무관심’하게 보는 비율은 ‘우리’나 ‘형제’로 보는 비율이 감소한 정도와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 북한을 ‘이웃’으로 보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이 지난 5년부터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던 응답자 중 약 12% 정도는 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을 가장 긍정적으로 즉 ‘우리’로 본 응답자와 가장 부정적 즉 ‘적’으로 본 응답자 비율은 2005년과 비교해 2020년 조사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우리’로 본 응답률은 2005년 30.5%에서 2020년 13.9%로, ‘적’으로 본 응답률은 2005년 8%에서 2020년 19.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남’ 혹은 ‘무관심’ 등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률도 2005년 14.5%에서 2020년 27.4%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 이념성향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진보에서 중도, 보수로 갈수록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은 증가했는데 카이제곱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이념성향과 북한인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수록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즉 북한과 북한주민에 관심이 많을수록 북한을 ‘우리’나 ‘형제’로 보는 빈도가 뚜렷했는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관심도의 영향은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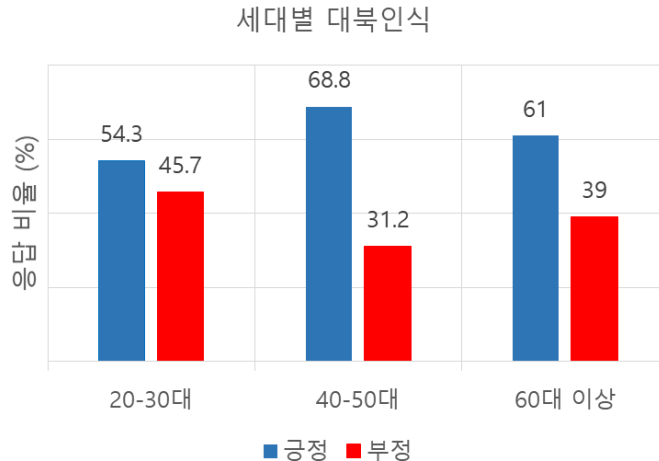
셋째, 2020년 조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북한에 대해 한국 국민들 세대 간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 북한에 대한 인식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30대 청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해 북한에 대해 가장 부정적 인식을 보여줬다. 반면 40~50대 장년층은 가장 우호적 인식을 보였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긍정과 부정 응답률은 20~30대와 40~50대의 중간으로 각각 나타났다.<sup>2</sup> <그림 3>은 연령대별 북한 인식을 그림으로 정리했다. ‘우리’, ‘형제’, ‘이웃’은 긍정 범주로 ‘남’, ‘적’, ‘무관심’은 부정 범주로 북한 인식을 코딩했을 때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세대 간 차이는 북한 인식과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sup>3</sup> 이는 각 세대에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동일할 가능성은 실제 거의 없다는 뜻으로 청년층과 장년층의 북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의미다.

있다. ‘이웃’ 응답을 어떻게 보던지 긍정적 인식의 감소와 강도 약화, 부정적 인식 증가 등 주요 결과에는 지장이 없다. 앞으로의 분석에서도 ‘이웃’을 긍정으로 보던 중립으로 보던 주요 결과가 코딩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sup>2</sup> 중립으로 측정된 ‘이웃’을 긍정 범주에 넣어도 청년층이 다른 세대보다 더 대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장년층이 다른 세대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도 마찬가지다.

<sup>3</sup> ‘이웃’을 중립 범주로 분리해도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동일했다. 즉 세대 간 차이는 세 범주로 구성된 북한 인식을 유의미하게 구분하는 요인이다.

〈그림 3〉 연령대별 북한 인식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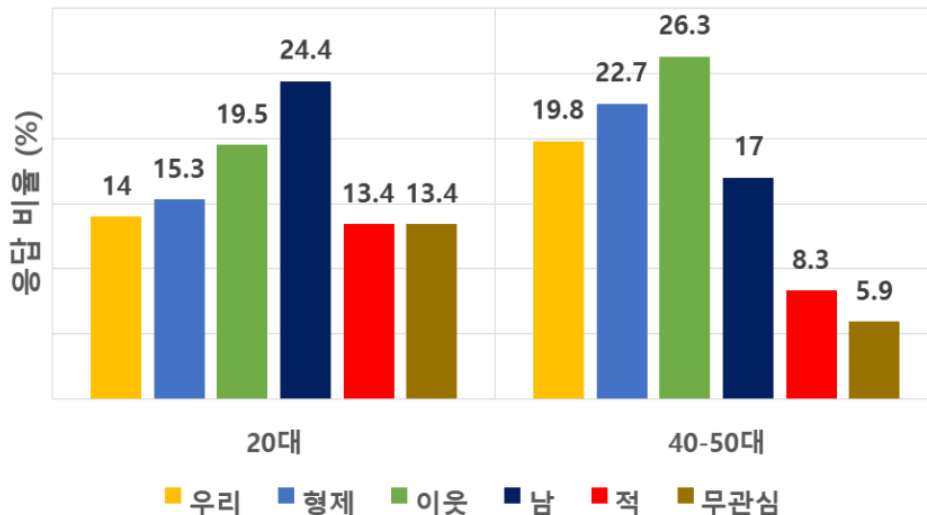
긍정과 부정 두 가지 범주는 한 가지 이상의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대 간 차이와 각 응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2020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부모 세대와 달리 별로 관심이 없는 자녀 세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40~50대 장년층을 현재 청년층의 부모 세대라고 간주하고 그들의 대북 인식을 살펴보자. 2020년 현재 장년층의 대북 인식이 우호적인 응답 비율의 최빈값 순위가 ‘이웃’, ‘형제’, ‘우리’ 순서로 가면서 세 응답을 합하면 70%에 가깝다는 점, 긍정 인식이 분명한 ‘우리’, ‘형제’로 한정해도 그 빈도가 42.5%에 이르는 점, ‘남’, ‘적’, ‘무관심’은 각각 17%, 8.3%, 5.9%로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년층 사이에서 북한을 ‘우리’로 생각하는 비율은 ‘적’의 경우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장년층의 절반을 구성하는 소위 ‘586’세대 즉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간 현재 50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50대는 그들이 청년층이던 80년대 경험한 민주화 과정에서 민족적 동질감을 우선시한 대북 인식을 형성했고, 북한 친화적 세대 효과(cohort effect)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장년층의 자녀 세대를 구성하는 20대를 살펴보면 부모 세대와는 매우 다른 대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북한 인식 문항의 최빈값을 차지한 응답은 북한을 ‘남’으로 생각하는 태도로 24.4%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을 긍정적으로 본 ‘우리’, ‘형제’의 응답보다 각각 10%씩 높은 수치다. 부정적 범주에 속하는 ‘남’과 ‘무관심’ 응답을 합하면 37.8%에 이르는데 이는 20대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냉담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년층과 달리 북한을 ‘우리’로 보는 응답과 ‘적’으로 보는 응답의 차이는 0.6%로 미미했고 이는 약 14%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던 장년층과 분명한 대비를 보였다. 정리하면, 20대 전체가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진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확실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20대는 부정적이긴 하나 북한을 ‘적’이라기보다 ‘남’이라고 보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당위성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 접근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대가 나고 자란 90년대 이후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완성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과 안정적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한국 전쟁의 경험은 물론이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강력한 반공주의교육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경제 발전 속에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국가와 공동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의 쇠퇴는 개인주의 성향을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풍족한

성장 과정을 누린 20대 입장에서 2000년대 이후 대남 도발과 핵개발을 지속해온 북한에 대해 부모 세대가 경험한 감정적 유대를 가질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을 하나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굳이 우호적이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은 냉담한 태도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 대북 인식 차이(2020년)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 대북 인식 차이 (2020년)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할 결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앞서 설명한 이념성향이나 세대 효과는 다른 주요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북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만을 분석했다. 북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이념이나 세대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이런 효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주요 변수를 통제하고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대북 인식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북한에 대한 평소 인식 문항의 응답을 두 가지 범주로 구성하여 0=긍정적(‘우리’, ‘형제’, ‘이웃’), 1=부정적(‘남’, ‘적’, ‘무관심’)으로 코딩하였다. 종속 변수가 더미 변수(dummy variable)이기 때문에 프로빗 회귀분석(probit regression)을 통계 모형으로 사용했다.<sup>4</sup> <표 1>은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코딩과 기술통계 값을 정리했다.

<sup>4</sup> 종속변수 2에서는 북한 인식을 더미 변수가 아닌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여 1=긍정적(‘우리’, ‘형제’), 2=중립(‘이웃’), 3=부정적(‘남’, ‘적’, ‘무관심’)으로 코딩했다. 종속 변수가 순서를 가진 범주형 변수이므로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ordered probit regression)을 사용하여 프로빗 회귀분석의 민감도 분석(robustness check)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정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인 이념성향, 북한 관심도, 그리고 세대의 효과는 ‘이웃’의 코딩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유의미했다. 그리고 프로빗 회귀분석에 강한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했다.



&lt;표 1&gt;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코딩과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1	북한 인식: 0=긍정적('우리', '형제', '이웃'), 1=부정적('남', '적', '무관심')	1003	0.38	0.49	0	1
종속변수 2	1=긍정적('우리', '형제', '이웃'), 2=중립적('이웃') 3=부정적('남', '적', '무관심')	1003	2.02	0.87	1	3
인구사회학 모형	성별: 1=남자, 2=여자	1003	1.50	0.50	1	2
	연령: 1=30대 이하, 2=40~50대, 3=60대 이상	1003	1.93	0.78	1	3
	청년층: 0=40대 이상, 1=30대 이하	1003	0.34	0.47	0	1
	교육: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3=고등학교, 4=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5=대학, 6=대학원 이상	1002	3.66	1.24	1	6
	가구소득: 1=하, 2=중, 3=상	1002	1.81	0.81	1	3
정치모형	이념성향: 1=진보, 2=중도, 3=보수	1000	2.00	0.63	1	3
	북한 관심도: 1=매우 많다, 2=어느 정도 있다, 3=별로 없다, 4=전혀 없다	1003	2.70	0.77	1	4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lt;표 2&gt; 북한에 대한 인식의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한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2020)

	인구사회모형	정치모형	종합모형1	종합모형2
성별	0.04 (0.08)		-0.03 (0.08)	-0.03 (0.09)
연령	-0.21** (0.06)		-0.18** (0.06)	
청년층(20~30대)				0.35** (0.09)
교육	-0.11** (0.04)		-0.06 (0.04)	-0.05 (0.04)
가구소득	-0.13** (0.05)		-0.13** (0.05)	-0.13** (0.05)
이념성향		0.15** (0.07)	0.19** (0.07)	0.18** (0.07)
북한 관심도		0.52** (0.06)	0.50** (0.06)	0.50** (0.06)
상수	0.67** (0.27)	-2.03** (0.20)	-1.22** (0.34)	-1.70** (0.31)
Log-likelihood	-655.04	-614.25	-605.50	-602.59
N	1001	1000	998	998

\* p<0.10,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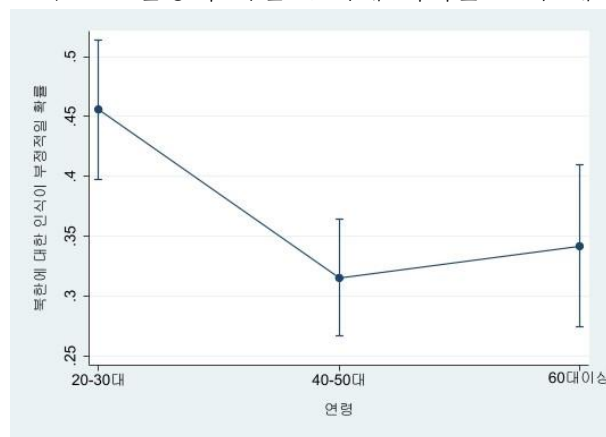
종속변수 = 평소 북한에 대한 인식(0=긍정, 1=부정)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표 2>는 프로빗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2015년 조사 결과와 일관되게 인구사회모형, 정치모형, 종합모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앞서 설명한 이념성향, 북한 관심도, 세대 간 차이는 모두 예상한 방향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인구사회모형은 성별, 연령과 청년층(20~30대), 교육, 가구소득 다섯 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됐다. 이중 인구사회모형과 종합모형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연령, 청년층(20~30대), 그리고 가구소득이었다.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종합모형1), 20~30대 청년층의 경우(종합모형2),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sup>5</sup> 종합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결과는 정치모형 두 개의 독립변수를 통제하고도 유지됐다. 세대 간 차이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구사회적 요인임이 밝혀졌다. 둘째, 정치모형은 이념성향과 북한 관심도 독립변수로 구성됐는데 두 변수 모두 북한 인식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응답자가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질수록, 북한에 대해 관심도가 낮을수록, 북한을 ‘남’, ‘적’, ‘무관심’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종합모형들에서도 정치모형 결과는 유지됐다.

<그림 5>는 <표 2>의 회귀분석 종합모형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 변수가 북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20~30대 청년층이 북한에 대해 ‘남’, ‘적’, ‘무관심’하게 인식할 확률은 다른 모든 통제 변수를 중간값에 고정시켰을 때 0.46을 기록했다. 한편 40~50대 장년층의 경우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같은 조건에서 0.32로 14% 하락했다. 60대 이상의 경우 장년층보다 소폭 상승한 확률을 보였고 세 예측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sup>6</sup> 이 결과는 기존에 대북 인식을 결정 하던 이념이나 관심도와 같은 정치 변수 외에도 세대 간 차이가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이 장년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북한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고 경제적 편익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5> 연령이 북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예측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sup>5</sup> 청년층(20~30대) 더미변수를 20대로 한정해도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또한 장년층(40~50)을 더미변수로 사용해도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바뀔 뿐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은 변하지 않았다.

<sup>6</sup> 대북인식의 차이는 긍정 범주에서 ‘이웃’ 응답을 중립 범주로 분리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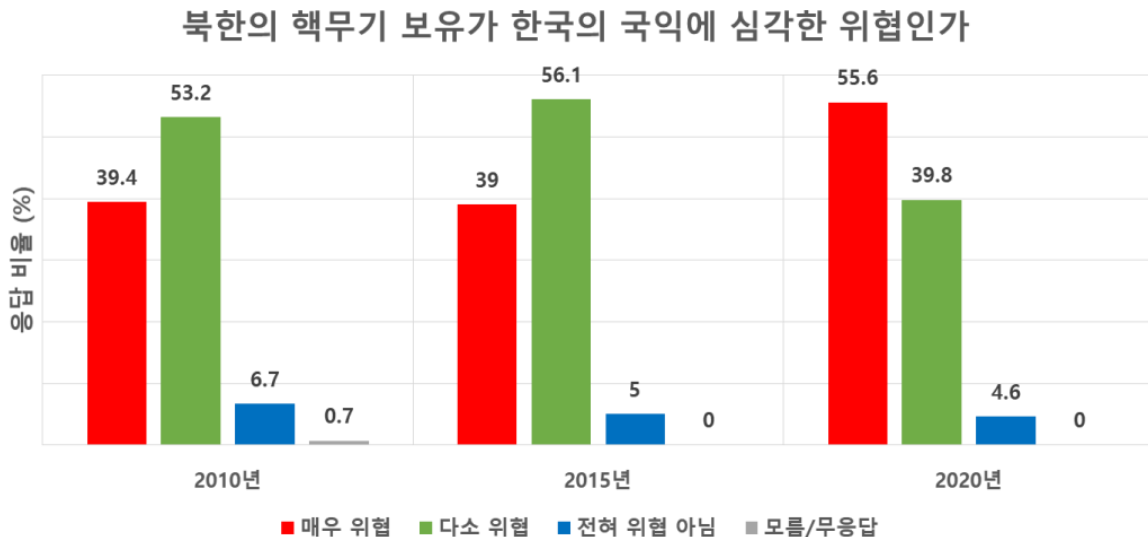
## IV. 북한 핵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1. 북한 핵에 대한 인식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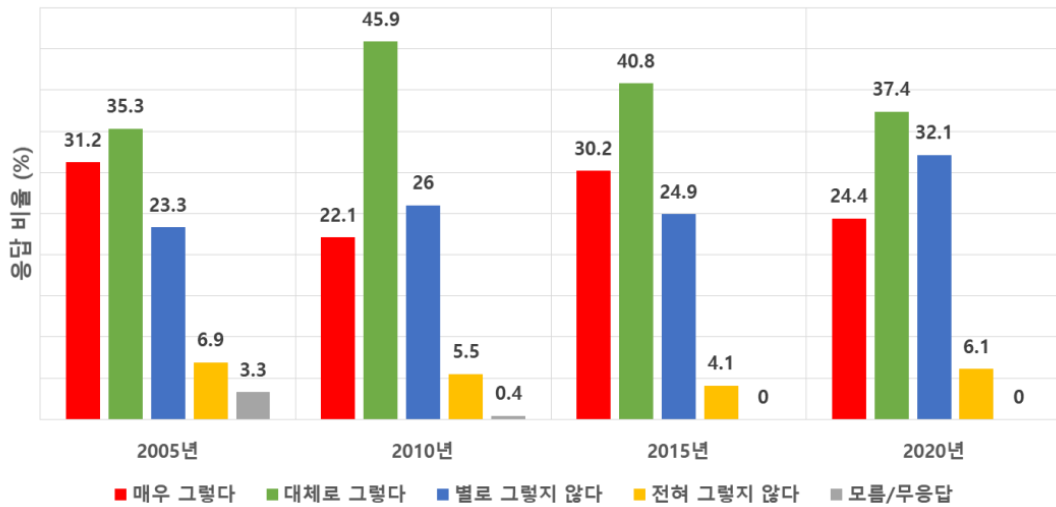
북한의 1993년 핵확산 금지 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로 말미암아 시작된 제1차 북핵위기는 1994년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2002년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후, 2003년 북한은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되고 2006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됐다. 이후 2009년, 2013년, 2016년(2회), 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거쳐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2020년 조사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 국익에 심각한 위협인가”라는 질문을 2010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물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대다수(95.4%)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에게 중요한 안보 위협이라고 대답했다. 자세히 보면 ‘매우 위협’과 ‘다소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55.5%, 39.8%였다. 이러한 위협 인식(threat perception)의 강도는 과거와 차이가 있는데 2020년 북한 핵이 ‘매우 위협’이라는 응답 비율은 2010~2015년과 비교하여 15%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4~6차 핵개발이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되면서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위협 인식은 더욱 증가했고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림 5>는 북한과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위협 인식을 보여준다.

<그림 5> 북한과 한국의 핵무기 보유의 인식



##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북한이라는 핵무장 국가의 등장은 한국에게 중요한 안보 위협이 됐고 이에 대응하여 유엔(United Nations, UN), 미국, 일본, EU 등은 경제 제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2019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한국, 미국 정상과의 몇 차례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 보였으나 실제 핵을 포기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한국 국민들은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90%) 그럴 것으로 예상했다. 더 주목할만한 것은 “북한 핵 위협이 중대하고 현실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북한 핵무장에 대한 자구책으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2%의 응답자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과반을 넘은 것은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래 일관된 결과다. 오히려 지난 15년간 거의 7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했고 2020년 지지세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2015년 이후 북핵 위협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현재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통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보다 실질적인 핵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나 아시아의 역내 핵공유(nuclear sharing) 등 핵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최근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중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 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2015년 이후 고도화된 북한 핵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를 반영한 반대가 소폭 증가한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태도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받았다. 북한을 ‘남’, ‘적’, ‘무관심’으로 볼수록 핵보유를 찬성했고 긍정적으로 볼수록 반대했는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이념성향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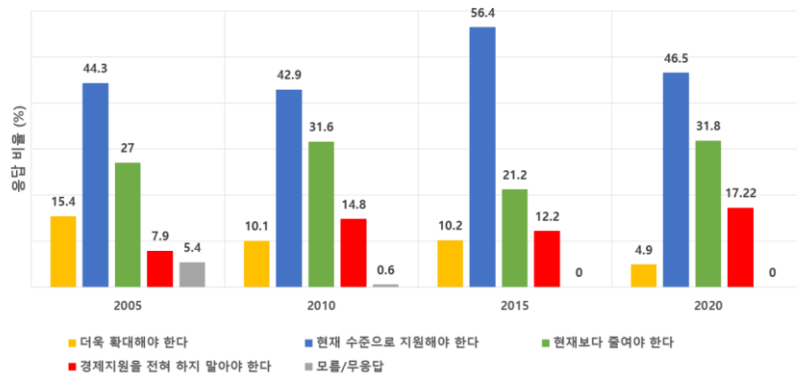
요한 결정요인이었는데 모든 응답자의 과반이 핵보유에 찬성하긴 했지만 그 비율이 보수 응답자의 경우 70%로 높은 반면 진보와 중도 응답자의 경우 58~59%에 그쳤다.

## 2. 대북 정책에 대한 선호

앞서 설명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감소와 핵무기 개발로 인한 안보 위협은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 증가 혹은 지속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대북 경제지원 정책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림 6>은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정책 중 경제지원의 경우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경제지원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95%에 달했다. 응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태도가 2005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5년 15.4%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고 현재 보다 줄이거나 지원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과거보다 모두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지원 물자의 부당한 전용 가능성,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인한 실질적 한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금강산 관광사업 혹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기존 지원 사업의 복구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태도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선호를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분석하면 인식이 정책 선호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인식에서 북한을 ‘남’이나 ‘적’으로 생각할수록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현재 보다 줄이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북한을 ‘이웃’으로 본 경우 현재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아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일관된 선호를 나타냈다. 또한 “대북 지원 정책 지지 여부”를 연령대별로 보면 우호적인 부모 세대와 냉담한 자녀 세대의 인식적 분화가 정책 선호에 그대로 반영된다. 전과 동일한 비교를

위해 20 대 청년층의 경우 대북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2%로 미미한 반면 40~50 대 장년층의 경우 약 8%로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반면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0 대에서 각각 38.5%, 20.3%로 가장 높았는데 현재 수준 유지까지 고려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해선 안 된다는 비판적 의견이 청년층(30 대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절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도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쳤는데 진보 응답자는 최소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6%를 차지한 반면 보수 응답자는 62.5%가 지원 감소 혹은 중단을 지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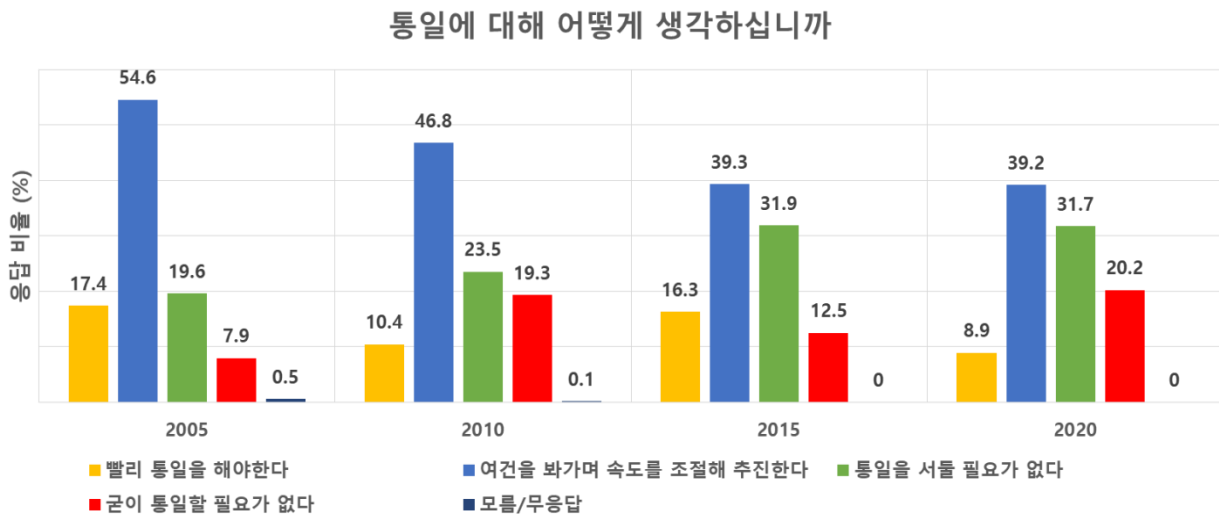
둘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도 그 수위를 더해갔다. 특히 유엔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이 있을 때마다 기존 결의안을 한층 강화하면서 2017년 말 석탄, 철광석, 섬유, 수산물, 석유까지 북한의 모든 주요 교역 물품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 이는 단순한 핵무기 관련 제재를 넘어 북한 경제 전체를 겨냥한 고강도 압박 정책이다. 이러한 대북 경제제재 정책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은 2020년 새로 도입됐다.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음으로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5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8%를 기록했다. 절반을 조금 넘는 응답자들이 제재 무용론에 동의하면서 제재 완화 및 철회를 지지하고 있는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이념성향으로 보수 응답자(55.3%)가 진보, 중도 응답자(50.6%, 51.6%)보다 더 제재 완화 및 철폐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설문에서 제재의 효과가 없다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오랜 기간 제재가 오히려 핵무장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불만이 보수 응답자를 중심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2020년 조사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정책 선호에 대한 설문이 추가됐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67.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32.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대처할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대 간 차이와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모두 북한 인권 중립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지 못했다.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도 중립적 북한 인권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57% 가까이 됐다. 이념성향도 진보와 보수 간 차이가 중립적 대북 인권 정책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진보 응답자의 68%가 한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보수 응답자 70.6%보다 낮은 수치였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비판적 태도를 가질 것 같은 응답자 과반 이상이 중립적 입장을 선호했는데, 북한 인권을 보편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V. 통일과 통일 방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북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현재 통일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간단히 정리하면 통일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 정도는 소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한국’은 13개 한국의 장기적 국가 목표 군에서 하위에 기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림 7>은 통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림 7> 통일에 대한 태도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첫째,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8.9%에 불과해 2005년 17.4%를 기록한 이후 2020년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통일에 다소 긍정적인 응답인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5년 이후 모든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05년 7.9%에서 2020년 20.2%로 증가했다.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을 포함한 통일 반대론은 2020년 조사에서 52%로 나타나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다. 통일에 부정적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는 사실은 공고해진 분단 체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통일 인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연령, 북한 인식, 이념성향을 꼽을 수 있는데 세 변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했다. 먼저 세대 간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31.3%의 응답자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들의 부모 세대에 속하는 50대의 경우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13.6%에 불과했다. 통일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 또한 20대와 50대는 16.4%의 격차를 보여 새로 등장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보여줬다. 통일을 장기적 국가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북한을 ‘남’, ‘적’, ‘무관심’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념성향에서도 보수 응답자 59.5%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진보 응답자의 56.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응답자들이 북한을 굴복시켜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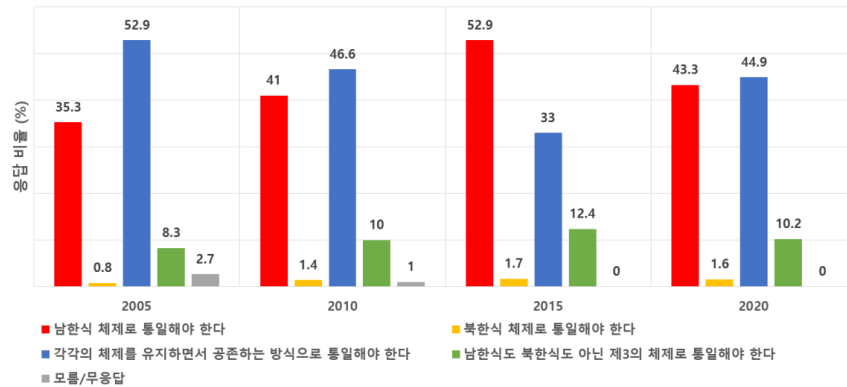
둘째, 만약 통일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41%의 응답자가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에’라고 답한 응답자는 29.5%였다. 이 질문에 참여한 사례 수는 482명에 불과한데 이전 통일에 대한 태도 설문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조차 그 이유로 경제를 꼽았다는 사실은 한국 국민들이 통일을 실질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통일을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당위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편익 계산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통일을 한다면 바람직한 남북 통일 방식은 무엇일까? <그림 8>은 다음 설문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통일 방식을 묻는 질문에 ‘남한식 체제’를 선호하는 응답자(43.3%)와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자(44.9%)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과 2010년 두 체제 공존형 통합이 남한식 체제에 비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2015년 조사에서만 남한식 체제에 대한 선호가 월등히 높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반드시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논의되는 공존형 통합(혹은 two-state solution)이 한국 통일에서도 중요한 방식으로 고려된다는 점이다. “통일 후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공존형 통합에 대한 선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2020년 한국 국민들은 통일 후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 중 경제적 부담(45.9%), 가치관의 차이(27.4%)와 정치적인 혼란(16.5%)을 순서대로 꼽았다. 세 가지 어려움 모두 북한을 남한식 체제로 급격히 변화시킬 때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북한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은 통일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란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50대에 걸쳐 공존형 통합이 남한식 체제보다 선호됐고 20대와 60대의 경우 남한식 체제를 선호했다.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선호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 응답자는 남한식 체제(45.8%)를 진보 응답자는 공존형 통합(49%)을 선호했다.



## &lt;그림 8&gt; 통일 방식에 대한 선호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넷째,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의 재건에 들인 비용은 막대했다. 유럽의 리더였던 서독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했던 동독을 통합하는데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독일 경제 규모의 4분의 1인 한국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한국의 18분의 1 수준인 북한과의 통일은 준비 없이 맞을 경우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 방식을 논할 때 통일 비용 문제가 빠질 수 없는 주제인 이유다. 독일은 ‘통일연대세’와 같은 세금 신설, 재정 확대, 국채 발행으로 비용을 마련했다. 한국도 통일세를 신설해 통일 비용을 조달할 것인가는 실제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한편 앞서 “통일 후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첫 번째 문제로 경제적 부담(49.5%)을 얘기했다. 한국에 닥칠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공존형 통합을 선택한다고 해도 여전히 통일 비용은 막대하고 재원 마련은 필수적일 것이다.

“통일을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을 내실 의향이 있는가?” 묻는 질문에 53%의 응답자가 통일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매년 20만원을 상한으로 부담하겠다는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93%에 달했다.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05년 조사 이후 일관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 방식이 남한식 체제와 공존형 모두 부담할 의지가 있는 평균 통일 비용은 비슷했다. 통일 비용 부담 의사는 세대 별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응답의 경우 20대(61%)가 50대(46%)에 비해 15% 높았다. 1년에 부담할 의향이 있는 통일 비용 액수를 종속 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응답자가 보수적 이념을 가질수록 부담의사가 없었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건 부정적으로 인식하건 부담 의사의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대가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많은 통일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었다.

## VI. 결론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오늘 여전히 한반도는 냉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0년 동안 남북한은 인구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거듭했고 전쟁 당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와 달리 서로에 대한 불신과 안보를 위협하는 대결 구도는 그대로다. 변화된 우리와 변화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평균적 추이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본 장은 어떻게 분단을 이해하고 북한을 바라보며 통일을 바라는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지난 15년간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2005년부터 동아시아연구원이 주관하여 5년마다 진행한 한국인의 정체성 여론조사를 사용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남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남한 체제만이 합법적이고 정통성을 가지는 정부로 인정했다.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은 이전 조사와 일관되게 부정적 인식이 증가 추세에 있었다. 또한 ‘남’, ‘적’, ‘무관심’과 같은 인식의 변화를 견인하는데 이념성향이나 북한 관심도와 더불어 20~30대 젊은 세대의 등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 핵과 관련해선 한국에게 중요한 안보 위협이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다수 응답자가 내다봤다. 한국의 대응책으로 제시된 자체 핵무장은 2005년 조사 이후 계속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대북 정책에 대한 선호는 비우호적인 대북 인식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경제 원조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95%의 응답자는 대북 경제 지원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경제 제재 정책을 완화 혹은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조금 넘어 제재 무용론에 동의했다. 마지막 정책으로 응답자 상당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개입보다 중립적 정책을 선호했는데 북한 인권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전보다 심해졌는데 ‘통일 한국’이 한국의 장기적 국가 목표에서 하위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통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통일 반대론은 2020년 조사에서 처음 과반을 기록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조차 그 이유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봤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은 더 이상 민족적 동질감에 근거한 당위적 목표가 아니었다. 응답자 대부분이 통일을 경제적 편익에 기반한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와 일관되게 통일 방식도 공존형 통합이 남한식 체제 못지않게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를 고려한 태도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대부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요약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인식은 북한의 분단 후 지속된 호전적 대남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키고 북한 주민과의 동질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최소한 ‘적’, ‘남’, ‘무관심’에서 ‘이웃’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재 상태로 이들 청년층이 한국 사회의 장년층으로 접어들어 중심으로 들어설 때 남북한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이질적인 두 국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에서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냉담한 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여러 경제 지원 정책은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을 지양하고 그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명분과 국내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호적이지 않은 특히 경제 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95%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자칫 북한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반발만 불러올 악수가 될 것이다. 지원 액수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정책의 준 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경제 지원을 통해 대북 협상 등에서의 실익이 있다면 그것이 단기의 정파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인권이 전략적 흥정의 대상이 아닌 남북한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가치임을 알리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정책에서 중립을 지키는 이유가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거나, 안보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통일의 필요성, 시급성, 방식, 재정 부담 어느 한 가지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우리의 소원인 시대는 끝났고 그런 태도에 종언을 고할 시간이다. 통일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경제 성장의 촉진으로 꼽으면서도 통일 후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며, 내 호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내기 싫다는 태도가 적어도 한국 국민의 절반을 넘는 상황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겠다. 이런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통일에 대한 감정적 당위성을 걷어냈을 때 예상되는 비용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봤을 때 통일이 가져올 혜택은 장기적이고 간접적이지만 그 비용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이다. 보수와 진보 정권에서 무수히 다듬어진 통일 정책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이유다. 이를 극복하려면 통일이 막대한 안보 비용을 제거하고 경제적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임을 설득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어떤 설득과 노력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병로 · 최경희. 2012.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40(1): 101-139.
- 김병조. 2015.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 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7(2): 3-41.
- 박명규 · 강원택 · 김병로 · 김병조 · 송영훈 · 장용석 ·정은미. 2014.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상익. 2014. “통일대박담론’의 구상과 한계.” 『군사발전연구』 8(1): 23-52.
- 백대현 · 이재완. 2015.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의와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2): 205-223.
- 송태민. 2015.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통일인식 동향 분석.” 『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 1월호: 1-8.
- 이내영. 2011.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강원택 · 이내영 편, 33-58.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_\_\_\_\_. 2014.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 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22(1): 167-206.
- 장민수 · 김준석. 2015. “북한 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적극적 통일인식에의 영향.” 『한국정치연구』 24(1): 111-139.
- 정은미. 2013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5(2): 74-104.
- 정은미 · 송영훈. 2012. “북한주민의 통일의식과 남한사회의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4(1): 221-254.
- 정주용. 2008. “참여지형에 따른 정보흐름의 변화가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4(4): 43-82.
- 조진만 · 한정택. 2014.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6(1): 149-178.
- 최영준 · 황태희 · 최우선 · 주형민. 2016.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정책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2013 년과 2015 년 국민인식조사 비교.” 『국제관계연구』 21(1): 5-32.
- 최우선 · 황태희 · 최영준 · 주형민 · 2016. “통일인식 차이의 원인: 합리주의적 설명.” 『아세아연구』 59(3): 84-112.

■ **저자: 황태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로체스터 대학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Texas A&M 대학교 조교수,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경제제재 및 원조, 청중비용, 인권, 북한의 정치 경제 등이다. 관련 논저에는 "Economic Sanctions and Government Spending Adjustments: The Case of Disaster Preparedness" (BJPS 2019, 공저), "Do sanctions spell disaster? Economic sanctions, political institutions, and technological safety" (EJIR 2019, 공저), "Talking to Whom? Changing Audiences of North Korean Nuclear Tests: Supervised Machine-Learning Analysis of the KCNA" (SSQ 2017, 공저), "Detecting audience costs in international disputes" (IO 2015, 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6) jwseo@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0월 13일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편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979-11-6617-029-4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